

‘北 오물풍선 사태’ 정치권 대응 미흡... “근본적 해결책 시급”

국힘, 오물풍선 피해보상법 발의 정부 “대북전단 막지 않겠다” 입장 야당, 대북정책 기조 변화 필요 지적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빌라 옥상에 떨어진 오물 풍선. /뉴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전국 곳곳에 떨어져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분노와 쓰레기가 섞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명분은 대한민국의 탈북민단체 등이 북측으로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행위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26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낸 후 이틀 뒤(28일)부터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오물풍선은 수도권을 비롯, 경남과 전북까지 날아가 떨어져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선 오물풍선이 주차돼 있던 차량 앞유리에 떨어져 파손되는 일도 있었다.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

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육군은 오물 풍선이 날아왔던 지난 1일, 저녁 참모들과 회의를 하느라 작전 지휘 현장에 있지 않은 제1보병사단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리고 휴일인 9일에도 전군인에게 출근 지시를 내리는 등 대비 태세를 바짝 조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에는 오물이 날아왔지만 긴장이 강화될 경우 풍선 안에 시민 생명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가 들

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오물 풍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답보 상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오물 풍선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세적인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실질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말폭탄, 입안보만 반복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다”며 “아무런 해법 없이 북한에 비난만 늘어놓는다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무책임한 대북 강경 정책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더욱 확산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지적하면서 “조국혁신당이 권고한다.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자”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북한의 ‘오물 풍선’을 막을 실질적인 방법도 찾지 않는다. 대북 확성기로는 풍선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측이 주장하는 오물풍선 살포 명분인 대북전단도, 이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문재인 정부 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현재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서라면 경찰이 전단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부는 별다른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일 때는 현재가 위급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대북 확성기 방송... 국민안전·국가안보에 만전”

대통령실 “사회혼란 용납 못 해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할 것”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23일 0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중단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NSC 회의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 간 긴장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북한에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착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위력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23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 및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중단됐다. 이후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해 5월1일부터 남북 양측의 확성기 철거가 진행된 이후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그리고 같은해 9월 남북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접경지 인근 군 훈련 등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오후 11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9일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로 식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에 위협되는 물질은 없었다는 게 합참 측 설명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달 28~29일, 이달 1~2일에 이어 여섯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까지 세 차례 살포를 통해 오물 풍선 총 1300여개가 살포된 것으로 식별됐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두 차례 오물 풍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9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국 측 초소 오른쪽으로 대북 확성기 관련 군사 시설물이 보이고 있다. /뉴스

선을 살포하자 지난 2일 NSC 상임위원회와 3일 실무조정회의,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남북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북 확성기 방송 모두 가능해진 상황이다. /서예진 기자 syj@

>> 1면 ‘현대차, 수소 사회 성공’서 계속

EU DSA법 시행...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링크드인 타겟 마케팅 중지 구글 위치 데이터 정책 변경 아시아권, 틱톡 등 2곳 적용

EU의 DSA법 시행 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법안에 맞춰 플랫폼을 통한 이용자 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알고리즘 편향 등을 막기 위해 EU가 시행 중인 법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많은 사례에서 EU의 기준이 국제적 기준으로 변화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9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MS의 네트워킹 플랫폼 링크드인(Linked

in)이 유럽에서 자사 플랫폼을 통한 타겟 마케팅(Target Marketing)을 중지했다.

타겟 마케팅은 사용자 데이터를 토대로 특정 그룹이나 개별 사용자의 관심사와 행동 패턴에 맞춘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직접 공개한 성별이나 직장정보 등부터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수집되는 위치정보, 검색 기록 등까지 모든 정보가 활용된다.

패트릭 코리건(Patrick Corrigan) 링크드인 법률·디지털보안 담당 부사장은 “광고주가 특정 범주의 사용자를 타겟팅하기 위해 우리 플랫폼을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는 관련 기능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발

표했다.

현재 DSA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총 19개로 17개의 플랫폼과 2개의 검색엔진(빙·구글)이다. 아시아권 기업으로는 알리바바 익스프레스와 틱톡 두 곳으로 국내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준은 유럽에서 서비스를 전개 중이면서 동시에 유럽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었다. EU는 DSA법에 의거해 만약 조사 후 시정 조치가 미흡하거나 명백한 DSA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선제적으로 EU 외 국가에 대해서도 EU 기준 적용에 나섰다. 구글은 12월부터 사용자의 시간대별 위

지 정보를 자사 클라우드가 아닌 사용자 기기 내에 저장한다. 지난 7일(현지 시각) 사용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클라우드 내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삭제할 예정이므로 사용자들은 12월 1일까지 자신의 위치데이터를 모바일 장치에 저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EU의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글로벌 스탠다드 또한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 A씨는 “국내에 아니지만 이미 해외에선 수많은 웹 사이트들이 사용자에게 웹사이트의 쿠키(Cookie)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묻고 있는데, 이 또한 EU발 변화다”라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내수 서비스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소 EU 기준에 대한 관심이 적지만, 향후 글로벌 도약 등을 고려한다면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

“생태계 리더십 확보 그룹사 협업 강화”

2013년에는 투싼ix 수소전기차를 양산하며 세계 최초 수소전기차 양산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2017년 도심형 수소전기버스에 이어 2023년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도 출시했다. 올해 초 열린 미국 ‘CES 2024’에서 연료전지 브랜드 ‘HTWO’를 그룹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로 확장하며 수소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사람감을 가지고 수소 사업에 임하고 있다”며 “수소 생태계 리더십 확보를 위한 그룹사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자원순환형 수소생산, 기술개발, 상용화 확대를 지속 추진해 수소사업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